



●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진안군을 방문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하계올림픽 전북 전주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같은 날, 남원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 뒤,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진안양수발전소 지원·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진안군·남원시

도민과의 대화서 도민들과 직접 소통, 지역 현안 논의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일환으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진안군과 남원시를 방문. 도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 지사는 이날 진안군의회를 찾아 전춘성 군수, 동청읍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안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군청 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전경성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를 주제로 전북자치도의 도전과 진안군의 특별한 상상·협력사업, 2026년 도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전주 하계올림픽 국제후보도시 선정, 퍼지컬 시 실증단지 유치, 17조원 투자유치,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 등 도

민과 함께 노력해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경성의 자세와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여민유지의 신념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진안홍삼농공단지, 진안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생태환경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전북자치도와 진안군이 함께 호흡하고 발맞춰야 할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작은 변화들을 쌓아 나가야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진안군의 강점을 잘 살려서 인구감소, 소멸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 이어진 대화에서 주민들은 △진안로컬푸드매장 전주호성점 신축 이전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 도 차원의 지원 소회하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관심과 지원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진안 양수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핵심 국가 에너지 인프라이다.”며 “도의 행정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전북의 새로운 역사

를 써 내려가고 계신 김관영 지사님과 진안의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진안군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치유도시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김 지사는 남원시를 방문해 시의회와 환담, 도민과의 대화, 사회복지시설 방문, 전통시장 장보기 등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청 도착 후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 의장단 및 도의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지역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 질의에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남원시가 건의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제2중앙

경찰학교 남원 유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유치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병종미술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도비 10억 원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등부노인복지관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설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구매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남원은 전통문화와 미래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기자·남원=김기두기자

## “완주·전주 통합 논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범기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완주·전주 통합은 끝난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1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등 주요 권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주·전주 역시 더 이상 결정을 미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특히 정부 차원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우리가 결정을 주저하는 사이 국가가 제공하는 통합 인센티브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지역 간 경쟁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직 늦지 않았다”며 “완주와 전주를 포함한 전북도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결단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시장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상상 방안과 관련해 “완주·전주 양 시·군 주민이 제안한 상상발전 10개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행정통합타운 조성을 비롯한 전주시의 분야별 약속 사항 역시 “통합에 대한 주민 의사가 확인되는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완주군민의 현명함과 전주시민의 위대한 결단이 만나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절실함과 책임 있는 선택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희성 기자

## “봉사에서 정치로... 도민의 울타리 될 것”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



정치는 때로 말이 앞서고 삶은 뒤에 숨는다. 그러나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의 정치에는 말보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실천하는 봉사의 삶이 먼저 있다.

낳고 소외된 이웃 곁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34년의 봉사 그 시간을 그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다.

김 부의장은 정치인이 되기 훨씬 전부터 봉사 현장을 있었다. 충남 논터리 클럽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봉사활동은 그의 삶이자 신념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다. 그에게 정치는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봉사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사명이었다.

그가 의정활동 중 장애인 복지에 특별한 애정을 쏟는 이유를 묻자 뜻밖에도 자신의 네 자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현장에서 마주한 장애인들의 삶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책임감은 김 부의장을 정치로 이끌었다. 개인의 선의로 돕는 봉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법이라는 현실 앞에서 깨달았다고 말한다. 자신의 지갑으로 돕는 일보다, 조례 하나와 예산

으로 수만 명의 삶을 바꾸는 일이 더 큰 봉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김 부의장의 시선은 언제나 힘없고 소외된 자들과 그늘진 곳을 향해 있다. 최근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은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비정규직을 위한 쉼터 조성이다.

그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조성된 이동 노동자 쉼터를 넘어, 버스 승강장과 생활권 공간까지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열선을 깔고 칸막이와 냉·난방 시설을 갖춰 대리운전 기사들이 풀(요청)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라도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성과로 그는 전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꼽았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와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구조를 제도화한 이 조례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북 교육의 든든한 뿌리 자리 잡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과정에서 유치특위 위원장을 맡아 행정부와 함께 뛰며 단기간에 성과를 이룬 경험 역시 그의 정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억이다.

김 부의장은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예산 배분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선을 지나 3선을 바라보는 지금 그의 목표는 오히려 더 단순해졌다. 그는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답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며 “그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자, 끝까지 지키고 싶은 초심”이라고 했다. /이만호기자

## “사과 없는 방문, 소통 아냐”

완주군민대책위, 김관영 지사 완주 방문 계획 반발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완주군 방문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송병주)는 14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관영 도지사의 완주군 방문을 “군민의 상처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대대책위 송병주 상임대표와 구생회 완주군새마을회 회장 김영기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 지회 회장 김유미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 사무국장 등 위원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김 지사의 이번 방문이 ‘시·군 연초 순회 방문’ 형식을 띠고 있으나 완주군민에게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여 동안 전주·완주 행정통합논의로 인해 지역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음에도, 도정 책임자인 김 지사가 어떠한 사과나 반성 없이 완주를 찾겠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 절차가 제시되지 않아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유보된 것으로 인식돼 왔음에도, 최근 김 지사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주민투표 없이도 의회 의결로 통합 결정이 가능하다”, “2월까지 특별법 통과되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태백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결단의 문제’로 언급한 것 역시, 통합을 정치권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책위는 “통합 여부는 군민의 선택과 충분한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그동안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완주군의회와 군민의 뜻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완주군민의 통합 반대는 감정적 반발이 아닌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모든 통합 시도에 대해 완주군민은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군민의 65%가 통합에 반대했고, 18~29세 연령층의 반대율은 80%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그 이유로는 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 자치권 및 재정 악화 우려, 지방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을 들었다. 대책위는 지난 2년간 통합 논란의 결과로 군민 간 찬반 대립, 지역 공동체 분열, 행정·재정력 낭비 같은 상처와 피로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사과 없는 방문은 소통이 될 수 없고, 책임 없는 대화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김 지사의 방문 강행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완주 행정통합추진으로 조래된 갈등과 분열에 대한 공식 사과 △사과 없는 완주군 방문 및 군민과의 대화 중단 △군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정치·행정적 행보 중단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모든 논의의 공식 공식 △통합논의가 아닌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성장과 민생 현안 집중 등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선관위, 20일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오는 6월 8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4층)에서 열리며, 도지사·교육감선거 입

후보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신고·신청 절차 △선거법 제한·금지사항 △정당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후원회 등록 및 후원금 모금 관련 사항 등 예비후보자가 반

드시 알아야 할 주요 선거 절차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중심 변화 절실”

국유영은 도의원, 오늘 전주시장 출마 공식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유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전주2·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15일 전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국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소통하며 “전주는 지금 개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중심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민선 8기 도의원 의정활동 기간 본회의 출석률 98.9%를 기록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발로 댄 현장 전문가임을 자임했다.

이러한 성실함을 무기로 시간 오래 동안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쳐며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으로 전주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오게 운영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 의원은 오는 2월 중에 자신의 정치 소신과 활약을 기술한 도서를 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지세를 결집하고, 전주의 경쟁력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